

강기정 “3조 투입 30조 규모 대기업 투자펀드 조성”

7조원 소상공인 살리고 연봉 5000만원시대 “민주당 본경선때 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대기업과 혁신 기업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 원을 투입해 30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기초 산업·임금 격차 해소에 7조원을 투입해 지역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

합이후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정부 재정지원금 중 3조원으로 조성된 3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는 전남 광주특별시가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스마트팜, 관광 등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150조원 규



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100여개 프로젝트를 추천 받아 투자 대상 심사를 하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 시도 정부의 국민 성장펀드처럼 추진 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문화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펀드는 정부의 재원을 마중물로 해 민간자원이 더해지는 구조”라며 “대

만과 일반 정부가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해 세계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도 창업펀드 5000억원 조성이 688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3년 동안 69개 스타트업에 486억원을 실투자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광주 창업펀드 조성 기금 중 930억원은 광주의 창업 혁신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구조가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조원 펀드는 앞으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성장 부가가 될 것”이라고 밝

혔다. 이어 강 시장은 “두 번째는 7조 원이다. 기존·위기 산업과 소상공인 예산 그리고 연봉 5천 수당 도달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2조, 기존·위기 산업 4조, 기타 1조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투자펀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평균 연봉 50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고 봤다.
강 시장은 “현재 광주지역의 평균임금은 3800만원으로 서울·울산·수도권 46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기업이 스마트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성장을 하면 평균 임금도 올라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6·3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선출 참여 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민주당의 경선일정이 최종 확정돼 8명의 후보에서 5명으로 압축되는 본경선이 실시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통합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의회 구성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6·3 지방선거 이슈... 에너지 공약 2제

민형배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 실현”

분산형 전력망·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주장 “재생에너지 생산·운송·저장 등 컨트롤타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실현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민 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RE100 산업단지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으로 전남·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낮추는 구조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연평균 1kWh당 10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경우 태양광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 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며 “운영비와 예비비를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kWh당 182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
민 의원이 구상 중인 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 전력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



행한다. 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 계약(PPA),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민 의원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전남·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신정훈, 반값 전기...에너지 수도 전략 제시

RE100 산단 조성·에너지공사 설립 등 4대 전략 발표 햇빛소득마을 1000곳 확대·수소 산업벨트 구축 구상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 위원장·사진)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값 전기’ 공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의원은 최근 ‘진삼캠 1호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초저가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전남·광주를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전남광주형 에너지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과거에는 향만과 교통망이 산업 입지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전력 가격과 에너지 공급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전남과 광주

가 이 강점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이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산업 수요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 성격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이 에너지 산업의 수익을 직접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만 평 규모의 RE100 전용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하고, 에너지공사와 기업 간 직접 거래를 통해 kWh당 90원 수준의 저가 전력을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단 한 곳당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햇빛소득마을’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1조원 규모의 녹색 금융을 조성해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햇빛소득마을 1000곳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광·신안·해남·목포·여수·광양 등을 잇는 남부권 수소 산업벨트 구축 구상도 밝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선·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연계해 수소 산업 밸류체인을 만들고 ‘전남광주 수소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국가 수준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서 현대리바트와 대경산업개발 간 하도급 분쟁 해결과 관련,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원회 송재봉 의원, 정 대표, 최창호 대경산업 회장, 염태영 의원,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광주 지방의원 후보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조국혁신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예비 의원들은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저 수준의 투표율과 무투표 당선, 특정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 등으로 광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치 다양성을 확대 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

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자들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도 요구하며 “과반의 지지를 받는 단체장을 선출해 정책 협약과 연합 정치가 가능한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윤러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거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요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광주시당, 광역·기초의원 경선 대진표 확정

시의원 20곳 중 16곳... 서구3·광산5 추가 공모 기초 9곳 경선... 동구 나·서구 나·광산 라 무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상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지역, 경선후보자, 경선방법을 확정했다.
광역의원 경선은 20개 지역구 중 최소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경선 후보는 △동구1 최순례·홍기열 △동구2 김재식·노진성·박미정·박성영 △서구1 추후 확정 △서구2 2오미섭·임진택·정평호 △서구3(여성경쟁) 추가 공모 논의 △서구4 김길원·서용규·신정호·심철의·안형주 △남구1 강일

호·남호현·박상원·박철호·서임석 △남구2 노소영·배진하·임미란·하주아 △남구3 김점기·박상길·박희을 등이다.
또 △북구1 반재신·안평환·전미용 △북구2 김건안·설정환·전우근·정영목 △북구3(여성경쟁) 김동희·박수민·이숙희 △북구4 김형수·이부일·조석호 △북구5 임종국·주순일 △북구6 추후 확정 △광산1 정재봉·윤혜영·임이엽·최지현·한귀래 △광산2 김명수·김장삼·박경신·박종원·이영순 △광산3 박필순·이영훈·조승유 △광산4 김동호·이귀순 △광산5(여성경쟁) 추가 공모 논의 등으로 확정됐다.
여성특구 4곳 중 단일 후보가 등록한 서구3과 광산4는 추가 공모 중이며, 나머지 남구2 선거구는 임미란 시의원이 경선

자격을 확보하면서 3인에서 4인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20개 지역구 중 서구 가·다·라, 남구 가, 북구 가·나·마·바, 광산 다 선거구 등 9곳에 경선을 치른다.
동구 나, 서구 나, 광산 라는 경선 없이 공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선거구는 선거구 확정 후 결정하기로 하거나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은 해당 선거구 관리당원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경선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과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국힘 공천신청자 ‘전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광주와 전남지역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출마할 후보를 공개 모집했지만 한 사람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이하 공관위)가 지난 8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29명이 신청서를 낸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자는 총 38명인 것

로 집계됐다.
TK(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 보수 텃밭에는 신청자가 크게 몰렸지만, 수도권과 호남 등에선 지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서울·경기 등 광역단체장에는 현역 시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4년 전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당시 광주시장에 주기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남도지사에 현 결과 총 129명이 신청서를 낸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자는 총 38명인 것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동구정장에 양해령 전 광주문화수도특별위원장 등 광주에서 3명이 출마했고, 여수시장에 신용은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 등 전남에서 4명이 뛰었다.
이번 공모에서 서울의 경우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3명이 접수한 반면, 현직 오세훈 시장은 접수하지 않았다.
공관위는 1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예비후보자 면접과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